

# ‘강선우·이진숙’ 신중한 여권... 여론 살피는 대통령실

### 민주, 갑질 의혹·제자 논문 표절 등 청문회 통해 사과·소명 판단 진보 야당 두 후보 반대 의사는 부담... 당정, 여론 추이에 촉각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후보자에 대한 방어에 나서면서도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인사 문제는 대통령실도 국민 눈높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에 청문회가 끝나면 종합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진실한 사과와 소명 등을 보고 국민께서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때 본인의 부족한 점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고,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관례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과도하게 부풀려져 보도되는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 원내 지도부 인사는 언론과 통화에서 “두 후보자와 관련해 전제적인 국민 여론은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소명에 대한 여론 동향을 더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두 후보자 거취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당 입장에서 감지된다.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논란, 이 후보자의 자녀 조기 유학 및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에 국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그것이다.

일부 진보 야당과 친여 성향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로 두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도 고민을 키우는 지점이다.

진보당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강 후보는 사실상 갑질 문제에 대해 인정했고 ‘거짓 해명’ 논란이 일며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사회민주당 청년위원회 역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새로운 적임자를 요청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역시 강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과거 제자 논문을 표절해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한 상태다.

국민 여론이 더 나빠지면 새 정부 국정 운영 동력 저하는 물론 자칫 야당에 정국 주도권을 넘겨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당 안팎의 우려도 없지 않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 정서를 건드린 측면의 이슈여서 대통령실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다만 어느 정도로 판단할지는 청문회 과정에 따라 추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론에서는 낙마 현실화로 정권 초반부터 밀릴 경우 오히려 국정운영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기류 역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인사청문 정국이 끝나면 각종 논란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다는 기대도 깔린 셈이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이 입장하자 일어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두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과 국민 여론을 지켜보고 임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낙마 사유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판단 시점이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난 이후일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시점은 결정된 바 없고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만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김영훈 “노란봉투법 곧바로 추진”

### 노동장관 인사청문회... 4.5일제·정년연장도 의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를 곧바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데 복안이 있느냐”는 질의에 “장관이 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정외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앞서 두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앞선 장관들의 노란봉투법 반대 논리에 동의하지 않느냐며 현실과 노동 3권을 규정한 헌법 33조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 3권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원하청이 형식적 고용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라든가 손

배소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니, 이런 불법의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파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등의 기업 우려에 대해서는 “장관이 된다면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같은 당 박해철 의원이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직무 유기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고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현장에서부터 노사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는 법”이라며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원청 최종 생산품의 품질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주 4.5일제와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추진 의지를 밝히며 추진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정성호 “檢 개혁 속도·노태우 비자금 환수 노력”

###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수사·기소 분리 지체하면 혼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환수에도 동의의 뜻을 밝히고 “(환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더 지체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며 “계속해서 공청회와 관련자 청문회를 받 새겨며, 일주일에 4~5회 해 가면 서 조문을 하나하나 축조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분리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검찰의 핵심 실·국장과 과장 등 요직

을 비검사로 임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바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다만 법무부의 업무에서 검사들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 잘 검토해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는 꼭 탈피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현재 법원이 재판 중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에 대해 공소취소 지시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는 정치를 해오면서 정파적인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서울 동대문구)의원이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고 말하자 정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를 명심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오월단체(5·18공자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 기념재단)들은 환영의 성명을 내고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군사쿠데타를 통해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부정축재재산을 형성했다”면서 철저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단체는 “노태우 비자금 문제는 신군부 전체 부정축재재산 환수로 반드시 확대돼야 하며, 이는 정의와 법치 실현, 그리고 역사적 책임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과 일가의 재산 흐름에 대한 법무부와 국제청의 전면 재조사, 은닉재산의 증거·상속·대여 여부 등에 대한 추적과 환수, 독립몰수제 등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신속 등을 요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